동북아공동체형성에 주는 유럽통합사례의 시사점

2005. 9. 28

동북아시대위원회

목　　차

I. 문제제기 : 왜 유럽통합인가?

- ▷ 동북아시대 구상과 유럽통합
- ▷ 유럽통합의 문명사적 의의

II. 유럽통합의 배경과 역사

- ▷ 유럽통합의 배경
- ▷ 유럽통합 약사

III. 유럽통합의 제도화 과정 : 부문별 분석

- ▷ 경제통합
- ▷ 정치통합
- ▷ 사회통합
- ▷ 문화협력
- ▷ 안보공동체
- ▷ 유럽통합의 제도화 : 부문 vs 전체
- ▷ 유럽통합의 부문별 연계 구조

Ⅳ. 유럽통합의 현재와 미래 : 성공요인과 향후 전망

- ▷ 유럽통합의 성공 요인
- ▷ 유럽통합과 독일 통일
- ▷ 유럽연합의 도전과 과제
- ▷ 유럽연합의 미래 전망
- ▷ 유럽연합의 세계적 영향력
- ▷ 유럽통합의 교훈

Ⅴ. 동북아에 주는 함의와 과제

- ▷ 유럽통합의 경험과 동북아적 특수성
- ▷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유럽통합의 시사점
- ▷ 한국의 역할과 과제

I. 문제제기: 왜 유럽통합인가?

동북아시대 구상과 유럽통합

동북아시대 구상의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공동체 건설

동북아시대에의 도전 (동북아의 공통현안)

- 중·일, 한·일,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 내재
- 북핵 문제, 양안위기, 영토분쟁 등 안보 불안 요소의 상존
-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갈등과 상호불신
- 역내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의 경합구도 심화
- 배타적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성 증대

주요 지역통합 사례

- AFTA (ASEAN Free Trade Area)
-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 EU (European Union)

대표적 사례로서의 유럽통합

- 유럽연합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체
- 유럽각국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당시 유럽의 공동현안을 극복

⇨ 동북아의 지향점에 대한 유럽경험의 시사

유럽통합의 문명사적 의의

"프랑스가 인류 역사에 남긴 유산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두 가지 위대한 업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20세기 유럽통합입니다. 자유·평등·박애의 혁명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고, 지금의 유럽통합 역시 21세기 세계질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 연설(2004.12.8) -

경제통합

- 경제통합으로 역내국 경제후생의 극대화 및 공동번영의 실현 추구
- 세계화에 대한 지역주의적 공동 대응(단일시장, 통화통합)

평화구축

- 통합에 따른 상호의존도 증대를 통해 역내의 항구적 평화 조성
- 통합체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대립구도 극복

정치통합

- 주권국가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국가주권의 부분적 제약
- 인류사상 최초의 국가간 정치외교안보협의체 추진

사회문화통합

-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의 지향점 창출

II. 유럽통합의 배경과 역사

유럽통합의 배경

평화에의 열망

- 적대와 반목, 불신의 항구적 종식을 위한 대안으로서 유럽통합론 대두
- 투명한 사회, 유럽시민의 참여 확대, 유럽내 세력균형의 유지를 통한 하나의 유럽 건설

지역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 지역통합의 가시적 형태이며, 유용하고 실용적인 수단으로서 경제통합 인식
- 경제통합에의 참여가 수반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개별국들의 기대
- 역내 평화정착과 경제통합 이익의 가시화에 따른 참여국 수의 증대

유 럽 통 합 약 사

발아기와 모색기 (1920-1930)

- 주로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유럽통합의 이상 추구
- 1차대전 후 재발 방지책으로서 유럽의 협력과 통합 방안 모색
  - 1923년 오스트리아 쿠데호브-칼레르기 공작, '유럽합중국' 운동 조직
  - 프랑스 수상 에리오(1924년)와 브리앙(1929년), 유럽연방 형성을 공식 제안

제1침체기 (1931-1945)

-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파시즘 부상으로 통합의 모멘텀 상실
- 각국이 자국 이해와 안보에 집착함으로써 민족주의, 보호주의, 배타주의 등이 만연
- 2차 세계대전으로 통합 논의 완전 중단

발 전 기 (1946-1967)

- 2차대전 후 전통적 주권국가 개념으로는 유럽에서 항구적 평화 불가능함을 인식
- 모네, 슈망, 데 가스페리 등 유럽연방주의자 부상, 슈망 선언(1950. 5. 9.)
-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 1967년 관세동맹 완성, 기존 3개 공동체의 기구통합, 유럽공동체(EC) 발족
- inner 6, outer 7의 대립 속에서 유럽공동체(inner 6) 중심의 통합 가속화

제2침체기 (1968-1984)

-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유럽경제 침체, 80년대 중반까지 유럽통합운동은 새로운 도약 없이 정체
- 1973년에 가입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연방주의적 통합에 반대
- 예외적 성과: 유럽통화통합을 지향, 역내 환율안정을 꾀하는 유럽통화체제(EMS) 도입

부 흥 기 (1985-1992)

- 1980년대 전반기 미국과 일본, 신흥공업국가들의 부상에 대한 우려 고조, 유럽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마르크화 급격 절상으로 경제적 위기감 고조
- 1980년대 초 프랑스 사회당과 독일 기민당이 각각 미테랑과 콜을 내세워 재집권, 유럽 통합을 위한 독불 협조체제 재가동
- 1985년 들로르의 위원장 취임 계기로 집행위원회 영향력 강화, 1992년까지 유럽공동 시장 완성을 동 위원회 목표로 상정
- 유럽이사회, 가중다수결제도 강화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 도입
- 1987년 단일유럽법(SEA) 통과, 유럽공동시장(EC1992년계획)의 법적 틀 완성
- 1989년 유럽 사회헌장 채택, 들로르 3단계 통화통합 제안 등장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EU) 출범

완 숙 기 (1993-현재)

- 1993년 EU 출범, 경제뿐 아닌 외교안보, 사회문화에서도 EU의 공동정책 도입 명시
- 1999년 Euro 단일통화체제 출범, 유럽중앙은행(ECB) 출범
- 2002년 Euro의 실물유통으로 통화통합 완성
- 2005년 발효된 니스조약에 의거 통합가속화, EU헌법안 비준 진통

III. 유럽통합의 제도화 과정 : 부문별 분석

경 제 통 합

약 사

-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
  1967년 유럽공동체(EC)
  1993년 유럽연합(EU)

지향 목표

-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이동을 막는 모든 장벽 제거로 단일유럽시장 형성
- 금융, 무역, 재정, 조세 정책의 통합으로 하나의 경제공동체 형성

주요 내용

- 경제 전부문 공동체: 1967년 관세동맹 형성, EU의 발전과 함께 단일 시장 완성, 공동통화, 공동농업, 공동무역정책 시행
- Euro 통화통합 달성

제도적 장치

- ECSC의 고위기관(High Authority) 설립 이후 참여국 정책 권한의 일부를 이양 받은 초국가적 집행기구 탄생, EEC 이후 EU집행위원회로 발전
- 각국 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 정부수반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이사회,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유럽의회, 사법재판소 및 감사원

효과와 의의

- 정. 동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나의 큰 시장 형성
- 역내 저소득국에 경제발전 및 성장 기회 제공

정 치 통 합

약 사

- 1970년 EC, 임의기구인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창설 승인
- 1985년 유럽정상회담,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정부간 회의' 정례화 결의
- 1987년 단일유럽법(SEA) 발효로 EPC가 유럽법상 공식적 모임으로 정례화
- 1993년 EU 출범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EU의 공식 목표로 채택

지향 목표

- 유럽정치공동체의 완성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유럽 건설

제도적 장치

- 1952년 ECSC의 발족후 EEC('58), EC('67), EU('93) 집행위원회로 발전
- 1974년 각 회원국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도록 국가정상회의인 유럽이사회 공식화
- 1979년 최초의 유럽의회 직접선거 실시
- 1987년 SEA 발효 이후 유럽위원회와 각료이사회, 가중 다수결 제도 확대 적용으로 초국가적 성격 강화

효과와 의의

-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 전체의 공공재 창출 및 유지 촉진
- 역내 일부 국가의 민주주의 확산, 인권 신장, 정치발전에 기여

사 회 통 합

약 사

- 1957년 로마조약, 경제통합에 따르는 지역격차 해소방안 모색 명문화
- 유럽구조기금(SF) 창설: '유럽사회기금('60)' '유럽 농업설비 및 보장기금('62)' '유럽지역발전기금('75)'; 1993년에 '결속기금' 추가
- 1989년 사회헌장 채택
-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 공동사회정책 조항 명시

지향 목표

- "사회통합형" 유럽통합: 각국의 사회통합을 유지시키며 지역통합 완성
- 통합이익의 조화로운 분배 실현 추구

SF의 주요내용

- 유럽사회기금: 유럽의 고용과 사회정책 수단으로 발전
- 유럽 농업설비 및 보장기금: 농촌구조조정과 농업생산전환 및 보완활동 지원
- 유럽지역발전기금: 낙후지역 개발 및 발전 위한 재정 지원
- 결속기금: 상대적 저개발 국가들의 환경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지원
- 기금재원: 38.1%는 각국 부가가치세 수입의 1% 징수, 42.3%는 EU GDP 대비 각국 GDP 비례 갹출금
  - 총 재원의 80.4%가 각국 분담금으로 마련, 결국 부국이 빈국을 지원

효과와 의의

- 구조기금은 역내 약소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여: 스페인과 아일랜드 성공 사례
- 역내격차 해소가 회원국간 유대의식을 강화, 통합을 촉진하며, 이는 부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상생 관계로 발전

문 화 협 력

약 사

- 1980년대까지 유럽국가들 간의 문화적 교류는 산발적 비체계적
- 1990년대 들어 공동체 차원의 공식적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EU 최초의 공식 문화정책 수행 명시

지향 목표

-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장기적으로 유럽의 공동문화와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유럽문화공동체를 지향

주요 내용

- '문화 2000' : 유럽 역사와 문화의 공동 이해 증진, 주요 유적과 문화유산 공동 개발, 상이한 문화간의 대화 및 문화통합 촉진
- 영상진흥정책: 영상 전문가 훈련, 영상물의 제작 기획 및 개발, 영화 및 기타 영상 제작물 배급, 영상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 유럽문화수도사업: 매년 한 두 도시를 유럽문화수도로 선정, 부근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각종 행사 지원
- 유럽언어 프로그램: 모국어 외 두 가지 이상의 유럽어를 습득하도록 지원
- 소크라테스사업(유럽 교육기관 및 대학생 교류), 라파엘사업(문화유산 보전)

효과와 의의

- 유럽 공동의 문화적 기반을 조성, 유럽적 정체성 형성 촉진
- 통합의 수준을 일상생활의 문화적, 심리적 영역까지 심화

안 보 공 동 체

약 사

- 1949년 미국 주도의 방위동맹인 NATO 출범 (유럽통합운동과는 무관)
- 1952년 ECSC 6개국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조약 초안 작성 (1954년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 거부)
- 1955년 서유럽(ECSC 6개국+영국)만의 동맹기구인 서유럽연합(WEU) 출범 (느슨한 조직의 집단방위협의체로 출발)
- 1975년 동서유럽 35개국 정상, 헬싱키 의정서 채택으로 범유럽 다자안보 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출범
- 냉전종식 후 1990년 CSCE의 상설기구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주, 평화, 단결의 새 유럽시대를 제시하는 파리헌장 채택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채택, EU의 독자적 안보역량 기반 확보 (WEU로 군사적 기능 위임)
- 1994년 CSCE,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전환 상설기구화, OSCE가 유럽 안보협력의 주체로 자리 매김

OSCE의 지향 목표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예방 외교, 군비통제를 통한 범유럽 안보협력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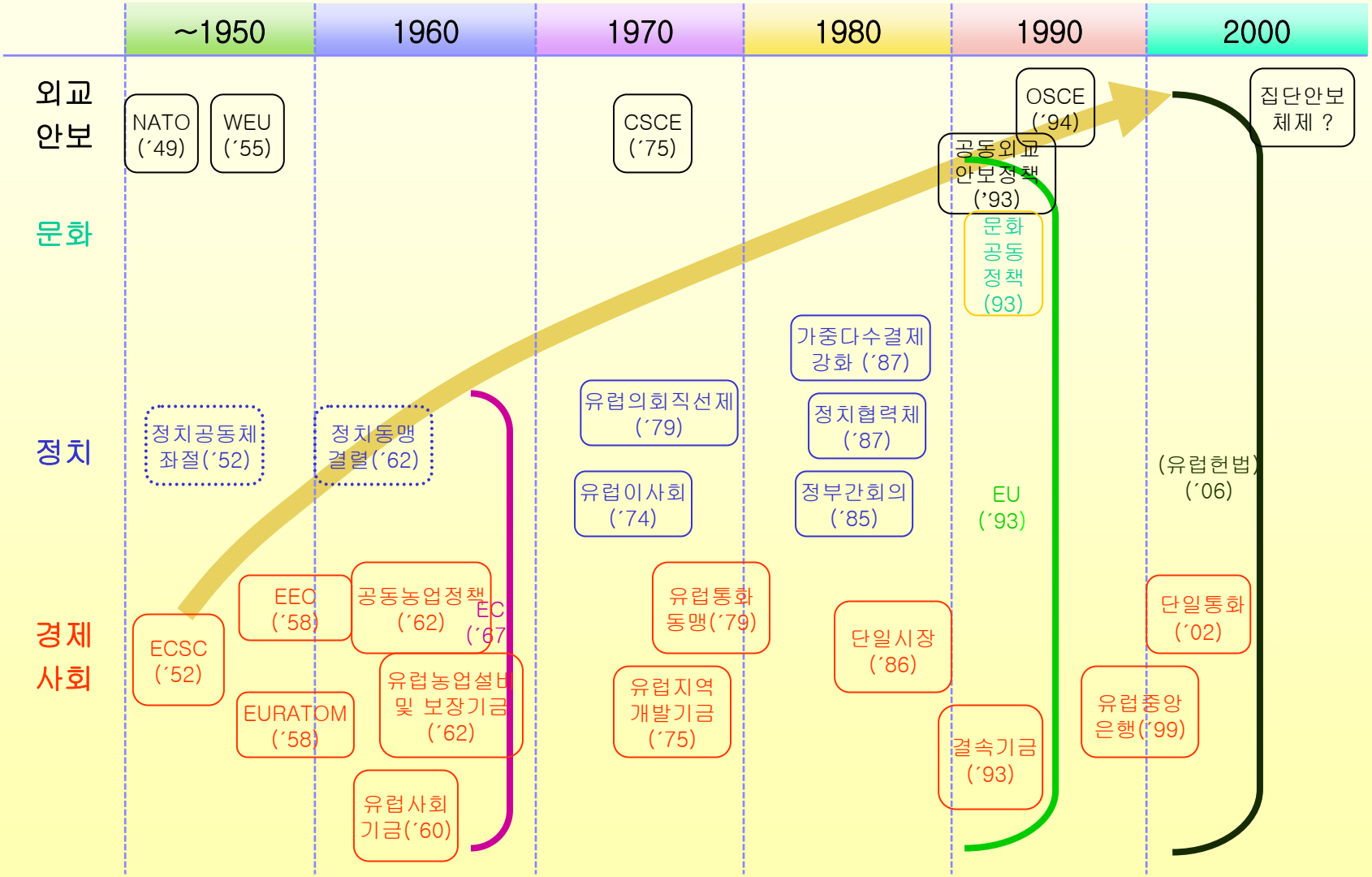
OSCE의 주요내용

- 헬싱키 의정서의 “Three Baskets"에 OSCE의 활동영역 명시
- basket 1: 유럽 안보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basket 2: 경제, 과학기술, 환경 협력
- basket 3: 인권, 소수민족보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협력

OSCE의 제도적 장치

- 사무국(비엔나), 상임이사회, 고위간부회의 등의 상설기구화
- 매 2년의 정상회담, 매년 각료회의, 매년 2회 고위급 회담
- 분쟁방지센터, 중재위원회, 안보협력포럼, 민주제도 및 인권청 등 하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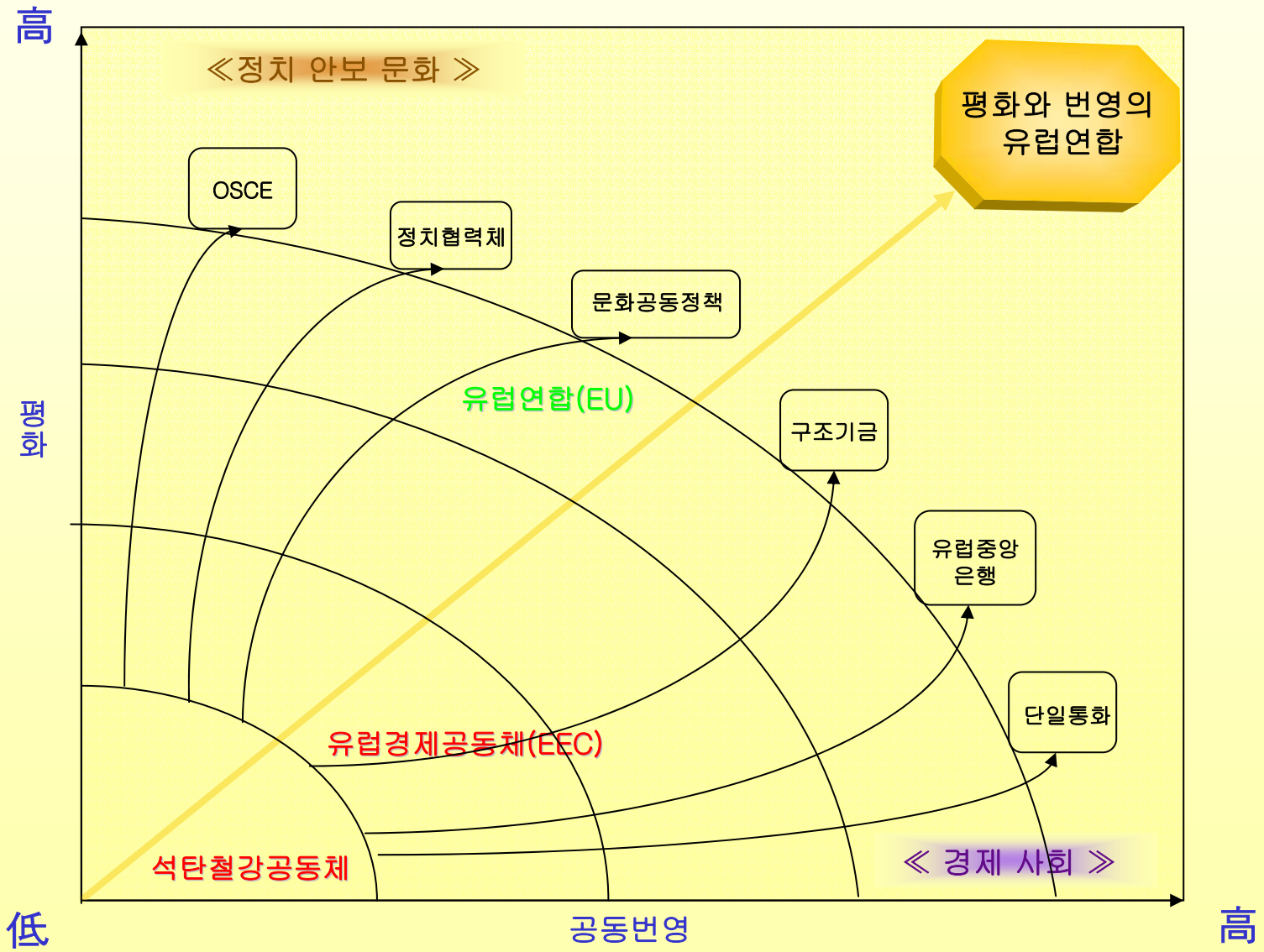
유럽통합의 제도화 : 부문 vs 전체



➡ **다차원적 추진 + 기능주의적 접근 = 통합의 심화(제도화)**

유럽통합의 부문별 연계 구조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 창출



Ⅳ. 유럽통합의 현재와 미래 : 성공요인과 향후 전망

유럽통합의 성공 요인

지역통합의 기본조건 충족

- 지리적 인접성
- 경제적 상호의존성
- 정치적 동질성 :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제도의 공유
- 이념적 친화성 : 기독교
- 사회문화적 유사성

선명한 통합이념과 비전, 철학의 공유

평화의 추구	- 유럽이 민족국가 단위로 분할되어 있는 한 갈등과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인식, 평화구현을 위해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 시도
민주주의, 인권, 법치 존중	-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념 가치 - 새로운 통치체제인 EU의 거버넌스 원칙 - 1993년 코펜하겐 기준, 민주주의, 인권, 법치 존중을 신규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명문화 (가치기반공동체)
세계주의	-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에 기초한 '유럽적 거버넌스'의 세계적 확산 지향

기능주의적 통합과 제도화

기능주의적 통합

- 유럽통합은 부문통합에서 출발, 점차 심화 확산 (점진적 기능주의)

o 경제의 한 특정 부문(ECSC)에서 시작, 경제(EEC) 전 분야, 관세동맹에 기초한 비정치적 분야(EC),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가 포함된 모든 분야의 통합(EU) 단계로 점차 확산 발전

→ ECSC는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한 경제협력 제도화의 모태

제 도 화

- ECSC, EEC, EC, EU로의 발전은 다름아닌 유럽국가들이 협력과 통합의 제도화를 추구한 산물

- 개별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초국가적 집행기구의 출범 및 권한 강화도 통합을 촉진

- 이러한 제도 및 기구는 개별국간 이해조정과 시장실패 방지를 위한 기제로 작용, 통합에의 참여유인 제공

각 단계별 국제 역학관계

- 초기: 유럽평화의 조건인 독불 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 절감
  냉전기 서유럽의 결속을 필요로 했던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
- 1980년대 이후: 미주와 일본의 부상에 대비한 유럽경제권 구축
- 1990년대 이후: 미국에 대응 가능한 통합유럽의 구축 필요성

개별국의 이익과 합치되는 협력과 통합 전개

프랑스

- 프랑스는 독일과의 수많은 전쟁, 특히 보불 전쟁, 1, 2차대전 등의 대규모 전쟁에서 계속 패퇴
- '독일의 유럽화'로 독일의 전쟁능력 봉쇄 추진
- ECSC의 추진은 자국 기간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라는 경제적 목적에도 부합

서 독

-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의 유럽화는 전범국가로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방안으로 인식
- 유럽통합을 통해 독일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으로 통합운동 적극 참여
- 유럽통합의 강력한 지지자가 됨으로써 경제력을 강화하고 독일통일의 역내외 지지기반 확보

유럽소국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소국, 부존자원 등의 한계로 국제무역에의 의존도 지대
- 유럽통합을 시장 확대와 무역 증진의 호기로 인식

영 국

- 공동체 건설 작업 참여 소극적
- 역외자의 기회비용 증대, 1960년대 중반부터 참여로 선회

독일과 프랑스의 통합 주도국 역할

프랑스의 이니셔티브

- 1920년대부터 국가정책으로 유럽통합을 추진
  - 프랑스는 빈번한 유럽 전쟁의 가장 큰 피해 국가
  - 일찍부터 유럽통합을 항구적 평화 정착의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
- 2차대전 이후 구체적 통합 방안을 마련, 본격적 외교력 발휘
  - 서독을 유럽통합정책의 최적의 협력자로 선정, 파트너십 개발
  - 기능주의적 통합 방안 제시
  - '대서양주의'에 맞서는 '유럽주의' 기치를 올려 역내 국가들의 단합 도모

독일의 과거사 청산 노력과 통합 리더십

- 2차대전 직후 프랑스 주도의 유럽통합 움직임을 국제사회 복귀 기회로 인식, 적극 참여
- 유럽통합의 걸림돌이 될 과거사 청산을 위해 진지한 노력 경주
  - 프랑스와의 역사교과서협의회 운영(1950년~1967년) 등 교육을 통한 과거 반성 노력
  - 1960년대 서독 사회의 대대적 과거 성찰 운동
  - 독일 지도자들의 반복적이고 진지한 2차대전 죄과에 대한 사과
    - * 1970년 빌리 브란트,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
- 라인강의 기적으로 획득한 경제력을 유럽통합에 필요한 지역 공공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사용
  - 역내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 서비스, 노동 시장 개방
  - 마르크화의 역내 안정 통화로서의 기능 수행
  - 역내국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유럽구조기금의 최대 출연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 양국 지도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ECSC를 포함한 모네 구상은 독일 수상 아데나워와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의 의기투합으로 가능
  - 아데나워와 드골의 우정이 1963년 독불우호조약 체결로 연결, 양국간 협력 제도화
  -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과 콜 수상 간의 협조로 양국간 특수관계 정립
    * 1982년부터 1992년 사이 미테랑과 콜이 만난 횟수는 무려 115회

- 1980년대 초 침체에 빠진 유럽통합운동의 부흥을 위해 독불 협조체제 재가동
  - 양국 행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 긴밀한 연락체제 가동
  - 들로르의 유럽위원회 위원장 취임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지지
  - 초국가적 성격의 강화를 위한 EU의 제도개혁 주도

- 통합과정의 쌍두마차 역할
  - 독불 협조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때는 통합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마찰이 생길 때는 통합 과정에 제동이 걸리는 현상 발생

정치 지도자의 역할: 내적 구심점

비전과 청사진, 추진전략의 제시

- 모네의 유럽통합 구상을 담은 1950년의 '슈망플랜'
- EEC와 Euratom 설립을 가능케 한 '스파크 보고서'
- 독일통일의 가능성을 유럽통합에서 도출한 '아데나워 구상'
- 1992년 유럽단일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제시한 '1992 프로젝트'
- 유럽통화통합의 추진전략을 제시한 '베르너 보고서'와 '들로르 보고서'

엘리트 및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구축 작업

- 모네, '유럽합중국 결성을 위한 활동위원회' 조직, 엘리트 동원
- 스파크, 초국적 엘리트 단체 '유럽운동' 운영
- 들로르, 지속적인 유럽 정상 외교 추진, 유럽 사용자 및 노동조합 대상의 '사회적 대화' 모임 정례화
- 아데나워, 유럽통합운동이 독일통일운동이라며 국민의 지지 호소

상호신뢰와 집단 정체성 형성 노력

유럽통합과 독일 통일

서독은 유럽통합에의 헌신적 노력으로 독일통일의 토대 구축

서독은 냉전 구도하에 분단을 통한 존립선택

- 서독은 냉전구도 하 자국의 존립이 서유럽통합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
  - 독일분단을 고착화하는 유럽통합의 출발점인 ECSC를 적극 수용
  - '유럽의 독일화'가 아닌 '독일의 유럽화'는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철저한 과거반성과 피해자 보상

- 수 차례 유럽을 피폐화시킨 전범국 독일은 동서독 분단의 극복과 유럽내 존립을 위해 과거의 반성과 피해의 기억을 치유할 필요성을 자각
  - 역사연구소 건립 및 역사공동연구협력, 나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 등

주변국 지지 획득과 냉전체제 극복 노력

- 서독은 강력한 경제력과 헌신적 리더십, 대서양 국가들과의 정치적 결속력 강화 등을 토대로 패권국 독일의 재부상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
  - 동서독은 쌍방 동맹국들과의 교차수교를 통해 역내 냉전구도 극복

유럽통합과정에서 통일 인프라 구축

- EEC 창설('57) 위한 로마조약 체결시 동독을 '그림자 회원국'으로 만들어 동서독거래의 특수성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 받는데 성공

유럽연합의 도전과 과제

초 기

주권 집착 및 자국 이기주의

해결방향	- 통합 이익의 조화로운 배분 실현을 통해 공동번영이 가능토록 추진 - 개별국의 기회주의적 행동보다 협력시 이익이 커지는 통합 설계
실현방안	- 공동정책 수행시 각국의 자율성 최대 보장 - 구조기금, 결속기금 통해 지역간, 사회 계층간 격차 해소 위해 노력 - 약소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

현 재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문제

유럽통합의 기본 정신	다양성 속의 통합, 즉 다양성과 통일의 조화
실현방안	- 국내법에 대한 유럽공동체법의 우위 원칙 - 초국가적 기구 틀 내에서 유럽 전체의 이익과 개별국 이익 조정 - 유럽이사회 및 각료이사회로 회원국 정상, 장관회담 정례화 - 정부간회의(IGC)를 모든 EU 조약 제정, 개정의 필수 조건으로 설치

영향력 배분과 민주성 확보 문제

역내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

- 강대국의 영향력 독과점에 대한 소국의 불만
- 강대국 독주를 의식한 소국의 과대 대표성 인정: 각료이사회 표결 방식,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에 소국 과다 배정
- 소국 과대 대표 현상에 대한 대국의 불만 팽배
- 강대국 전횡과 담합에 의한 약소국 지배를 방지할 방안 모색 중

민주성의 결핍 문제

- EU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장치 미비
- 정책책임성,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요구 반영에 취약
-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유럽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추진 중

역내 격차 해소 문제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 해소는 EU의 공식 목표

격차 문제는 EU의 남유럽 및 중동부유럽 확대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

해소 방안

- 3개 유럽구조기금과 결속기금 창설
- 취약지역 인프라건설을 위한 유럽투자은행(EIB) 설립
- 지역 및 지방당국 대표로 구성된 '지역위원회(CoR)' 설립

기금 부족과 배분 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 여전

유럽연합의 미래 전망

유럽연합의 확대

2004년 5월 중동부유럽 10개국 신규가입으로 회원 25국, 인구 4억 5000만 명으로 확대

EU 확대는 계속될 전망

- 현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가입협상 진행 중
- 유럽연합 최종 규모는 '27개국+α'가 될 전망

EU 확대의 예상 효과

- EU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증대
- 무역, 투자, 고용 창출 효과에 따른 신입회원국들의 경제성장
- 유로존 확대에 따른 유로화의 약진

유럽 정치외교안보공동체

성공적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한때 좌절된 정치외교공동체 건설의 재추진

2004년 10월 유럽헌법조약안 채택, 현재 회원국별 비준 절차 진행 중

유럽헌법 발효의 장애물	- 부국 국민들 유럽헌법 발효로 인한 경기침체, 불법이민 증가, 실업률 증가, 사회보장 축소 우려 - EU내 국가간 영향력 배분과 민주성 확보 문제 -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EU헌법 부결 (2005, 05~06)
예상 결과	- 1) 폐기 가능성, 2) 연방주의적 요소 약화 후 재비준, 3) 비준 거부국을 제외하고 기존안 발효 - 현재 13개국 비준, 2개국 거부, 10개국 비준 준비 중, 일부 국가 비준 연기 가능성 농후

유럽연합의 세계적 영향력

새로운 위상과 영향력

정치외교

- EU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실체로 등장
- 향후 정치통합 심화시 EU 중심의 국제정치구도 개편도 가능

경 제

-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대외협상력 강화
- EU 확대후 역내경제의 활성화로 유럽산업의 경쟁력 향상 기대
- EU의 경제적 성공은 타 지역통합의 모델로 부각 → soft power 제고

사 회

- EEC 창설때부터 회원국간 사회 및 노동기준 통일 노력 지속
- 현재 EU 공통의 사회보장 및 노동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
- 향후 역외국의 사회노동정책의 수준 제고에 기여

문 화

- 영화, 출판, 음악 등에서 EU의 문화산업은 고도의 경쟁력 확보
- '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EU의 문화정책 활성화로 문화적 영향력 확대

대미관계의 변화, 거대한 단일 국제정치 행위자로 부상

대미견제세력으로 부상

- 냉전종식으로 공동의 안보이익 감소, 경제이익의 상충 가능성 증대
  - 농산물시장개방, 이라크전, 쿄토의정서, 대인지뢰금지협약, 이란 핵문제 등에서 대립
- 특히 9. 11 사태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EU의 반발 고조

동등한 협력자로 변화

- 탈냉전후 새로운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
  - 인종갈등, 테러, 질병, 인신매매, 국제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 협력방법, 해결방식 등에 대한 갈등은 상존하나 문제의식과 궁극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유지

단일 국제정치 행위자

- 국제협상에서 개별회원국보다 EU 전체로서의 발언권 및 영향력 지대
- 현존하는 지역통합 모델로서 지역통합의 확산 촉진(soft power 과시)
  - ASEM은 EU와 동아시아 지역간 협력 강화에 기여
  - NTA(New Transatlantic Agenda)와 TAFTA(Transatlantic FTA)는 각각 EU와 미국, EU와 미주지역간 협력체 구축 유도
- 새로운 지역간협력체 형성 주도로 세계경제에의 영향력 확대

유럽통합의 교훈

다차원적 추진 + 신기능주의적 접근	ㅇ 경제 및 외교안보, 사회문화에서 다차원적으로 동시다발적 통합 추진 – 그러나 외교안보협력체의 조기 출범은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좌절, 통합이 용이한 경제분야부터 통합의 제도화 실현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ㅇ '통합이익의 조화로운 분배 실현'은 EU의 최대목표로, 이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약소국에 통합에의 참여유인 제공 ㅇ 이를 통해 협력이익을 학습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협력 심화 ㅇ 역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어야 통합지지 가능
명확한 내적 구심점과 지도자의 역할 지대	ㅇ 유럽통합의 중요성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정치 지도자의 등장과 이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통합을 촉진 ㅇ 들로르와 같은 초국가적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
서독은 자기반성과 헌신적 통합주도로 독일통일의 기반마련	ㅇ 서독은 철저한 과거반성을 통해 주변국의 신뢰 회복 ㅇ 서독은 강력한 경제력과 헌신적 리더십을 토대로 전범국의 오명을 씻고 유럽통합의 선구자로 거듭나 역내외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 획득 ㅇ 초기 유럽통합은 독일분단을 고착화시켰으나 이후 서독은 유럽통합을 통해 경제력을 강화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해 독일통일에 적극 활용

※ 신기능주의 : 기능주의의 파급효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 제도적 틀을 형성해 가는 통합 방식

V. 동북아에 주는 함의와 과제

유럽통합의 경험과 동북아적 특수성

동북아 통합에의 적용상 한계와 제약

중상주의적 관성과 국내적 이해갈등

- 높은 성장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 중상주의적 관성에 의해 개별국 시장의 통합에 대한 뿌리깊은 두려움 존재
- 각국내 이해집단간 갈등조정기제의 미흡

안보적 불안정성과 역내국간 격차 극심

- 외교안보적 불안정성 상존, 정치적 이념적 격차 지대
-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부국과 빈국 공존

국가주권에의 집착과 배타적 민족주의

- 19세기말 비로소 국가주권을 회복한 동북아 제국에는 국가 주권 이양에 대한 거부감 및 배타적 민족주의 존재

내적 구심점 부재와 역내국간 갈등 가능성

- 독-불과 같은 강력한 내적 구심점 없고 역내국간 갈등과 대립 가능성
  -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미-중, 일-중 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유럽통합 사례의 시사점

1.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실현가능 분야 중심으로 접근

FTA를 경제공동체 실현수단으로 활용

- 동북아 현안의 복합성으로 당분간 경제통합에 주력
  - EU의 경우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통합 우선으로 선회
- FTA,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외정책 수단으로 인식
  - FTA를 단순한 통상정책수단이 아닌 외교안보적 수단으로 인식

역내 지역격차 완화

- 역내국간 극심한 격차 해소의 제도화는 동북아통합의 필수조건
  -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구조기금' 등 설립 위해 노력

에너지, 환경 분야 등 협력 강화

- 에너지, 환경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 우선 논의
  - 유럽에서도 ECSC 등을 중심으로 통합 노력 시작
- 동북아 에너지 협력 대화(dialogue) 추진

2.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북아공동체 접근

동아시아 공동체 활용

-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그룹으로서의 동북아공동체
  - EU의 경우 OEEC를 통하여 유럽통합 자연스럽게 논의
- 동아시아공동체의 전개과정에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체 논의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유럽통합 사례의 시사점

3. 순차적,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조속한 제도화

순차적 통합 공동체 형성

- 역내 정치체제, 소득수준, 지향점이 유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선적 공동체 제도화 추진
  - FTA, 환율조화, 구조기금 분야 등

공동체 협의 기구의 조속한 출범

- 공동체 형성 추진 기구의 조속한 출범
  - EU의 경우 EU 집행위원회 등 전담기구 제도화 이후 통합 추진력 배가
- 6자회담 구도를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 및 다자 안보협력체 구축

4.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미국의 참여 및 기여 유인

동북아 통합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력사업 설계 및 추진력 확보
  - EU의 경우 유럽경제통합을 통한 유럽경제의 부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끊임없이 주지시킴.
  - 동북아의 개방된 지역주의의 특성 강조, 통합과정의 투명성 제고
- 미국의 역내 안보협력 참여를 지지하고 한미동맹도 확고히 유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유럽통합 사례의 시사점

5. 동북아공동체 비전 제시

동북아 지식인 및 시민 사회 유대강화

- 동북아 지식인 및 시민사회에서의 유대 및 공감대 형성 강화
  - 유럽도 지식인 및 시민사회에서의 통합 노력이 일반에 전파됨.
  - 상시적인 동북아 연대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구체성 지닌 비전의 제시

- 동북아공동체의 협력 사업과 통합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
  - EU의 베르너 보고서 등이 비록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유럽통화통합의 밑그림이 되었음.
- 공동체 추진의 비전은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영향력 배가 – EU의 경우 선구적인 보고서들은 통합의 구체적 절차까지 제시

6. FTA를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의 현실적 수단으로 인식

한국을 FTA의 중심 축으로

- 한-일 FTA와 한-중 FTA의 실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첫걸음
  - 이를 통해 중-일 FTA, 삼국간 FTA의 추가 확산 유도
  - 유럽도 베네룩스 삼국 관세동맹에서 시작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유럽통합 사례의 시사점

7. 북한의 참여와 동북아공동체 형성

역내평화조성에 기여할 협력사업 발굴

- 경협거점개발, 에너지, 철도, 농업, 환경 등 동북아 협력사업에 북한의 참여 유도-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동북아통합에의 여건 조성

동북아 통합논의에 북한의 관심 유도

- 다양한 차원의 역내통합 논의 추진시 북한의 업저버, 또는 회원 자격 참가 독려

동북아 통합 주도로 남북통일의 토대 마련

- 한국은 전범국가가 아니므로 통일의 정당성 확보에 독일보다 유리
  - 통합운동 주도과정에서 남북통일이 동북아 통합에 기여함을 강조
- 동북아 통합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

남북협력의 제도화에 국제적 지원 확보

- 민족간내부거래의 특수성이 국제법적 보편타당성을 획득하도록 노력
- 국제기구의 지원형태를 띤 북한의 동북아협력사업 참여를 간접지원
  - 두만강유역개발, 환경협력, 국제전력망연계사업 등

한국의 역할과 과제

적극적 리더십 발휘

- 대통령은 동북아통합의 선구자로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
  - role model: 모네(평화주의) + 아데나워(통일역군)
- 화해와 평화의 교류를 선도할 '동북아의 들로르' 육성
- 성숙된 민주주의를 토대로 시민사회의 동북아통합운동 주도를 지원
- '동북아비전그룹' 등 동북아 공동체 관련 연구 추진 제의 및 선도

동북아 관련 연구 주도

- 동북아공동체 형성 작업을 위한 전문 연구재단 설립
  - 역사문제, 통합의 로드맵, 동북아 거버넌스, 초국가적 통합기구 등 연구
- '제주평화연구원' 등 관련 기구의 설립 및 국제회의 주도로 한국을 '동북아의 브뤼셀'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조성

6자회담을 토대로 동북아 경제 및 안보 협력체제 추진

- 6자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동북아 경제 및 안보 협력체제의 틀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

동북아 통합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구축

- 독불 관계와 같이 통합의 내적 구심점이 될 동반자 관계 구축이 중요
  - 주변 피해국과 다각적인 연대를 모색하여 일본의 변화 촉구
- 역외국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역내 발언권 강화에 긴요